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홍익표, 이종운 전문연구원
2. 출장기간: 2011. 4. 24~27
3. 출장지: 중국 단둥
4. 출장목적: 한중 국제세미나 주관 및 참석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4. 24	서울-단둥	이동	
4. 25	단둥	세미나 참석	
4. 26	단둥	세미나 참석, 경협현장 방문	
4. 27	단둥-서울	이동	

III. 활동 내용

1. 한-중 국제세미나 개요

가. 회의주제

☐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 동향과 한·중 협력의 과제

나. 배경과 목적

☐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최근 내용과 방식 등에 있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과거 변경무역 위주의 북중간의 경제교류가 중국기업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인프라 연계와 같은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계획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 투자는 국가주도로 진행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북핵문제이후 북한의 대외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과 2010년 김정일의 방중이후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차원에서 논의되던 동북3성과 북한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사업들이 최근 구체화됨으로서 북중 서부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압록강 하구의 섬인 위화도와 황금평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당국은 황금평 지역을 특구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이 서부접경지역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동 주제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부재함.

☐ 따라서 이번 한중 국제세미나를 통해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특징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정책적 대응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다. 주최 및 협력 기관

☐ 한국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측 협력기관: 중국 요동대학, 요녕성 사회과학원

라.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1년 4월 25~26일

□ 장소: 중국 단둥시

바.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

◆ 세미나: 4월 25일(월)

09:00 ~ 09:30	등록	
09:30 ~ 10:00	개회사	조명철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환영사	- 이성호 (요동대학교 당위서기) - 유호열 (코레아정책연구원장 원장)
10:00~12:00	세션 I: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 평가와 전망	
	사회	양창석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대표)
	발표자	- 북중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조명철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북중 접경 경제무역 협력의 현상과 발전방향 - 만해봉 (요동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소장) - 북중 투자 협력현황과 향후 전망 - 김철 (요녕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지정토론자	- 홍권표 (지식경제부 과장) -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장 준 (하얼빈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 우영자 (요녕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오찬	
12:00~13:30	세션 II: 서부 접경지역 개발협력에 대한 각계의 입장과 평가	

	사회	포전동 (요동성 사회과학원 원장)
	발표자	- 북중 경제협력의 정책 배경과 발전 전망 - 우소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 북중 변경지역 개발협력의 원인 및 대책 - 안진리 (단둥 정보협회 회장) - 대북투자에서의 문제점과 몇가지 견해 - 장 강 (북방투자유한공사 사장)
	지정토론자	- 이기동 (한국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홍익표 (KIEP 전문연구원) - 김용현 (동국대 교수) - 마소평 (요녕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15:30~16:00	Break	
16:00~18:00	세션 III: 북중 서부접경지역 개발의 정책과제	
	사회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발표자	- 북중 길림성 접경 경제협력의 현상 및 과제 - 장혜지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부원장) - 북중 초국경 산업개발과 협력과제 - 장동명 (요녕대학 교수) - 북중 서부접경지역 물류인프라 개발을 위한 과제 - 안병민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북중 접경지역 서비스산업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자	- 이종운 (KIEP 전문연구원) - 김경일 (북경대학교 교수) - 강희국 (요녕태성국제무역유한공사 사장) - 임수석 (기획재정부 과장) - 김정동 (단둥해운국제화운공사 사장)

◆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 및 방문조사: 4월 26일(화)

09:00~12:00	라운드 테이블 종합토론	공동 사회	김양우 (SK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지정 토론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지혜범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용승

		◆ KIEP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조명철 ◆ 국토연구원 김친규 연구위원 ◆ 요동대학교 소장 만해봉
12:00~13:30	오찬	
13:30~18:00	한국측 참석자 북중접경 개발예상지역 방문조사 - 목적 ○ 위화도, 황금평지역 개발과 관련한 현지 답사 ○ 신의주-단동 경제협력과 관련한 단동시 관계자 면담	

2. 한중 국제세미나 주요 내용

가.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1) 북중관계의 주요 고려사항

☐ 동북아 안보구도의 변화

- 냉전해체와 경제협력 중심의 다자관계 활성화
- 중국의 대북한 전략적 안보이해관계 상존
- 북한의 체제유지 집착과 핵개발의 등장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국의 이해관계 상충

☐ 한중관계의 확대, 발전

- 한중 무역 확대
 -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4번째 교역대상국
- 한국의 대중투자 지속적으로 확대
 - 한국은 대중 투자 3위국

- 2009년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한중협력의 필요성 증대

☐ 중국의 동북진흥계획 추진

-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의 본격화와 북중 접경지역 연계개발
- 북한내 경제협력 거점지역 중점 개발: 라진선봉특구, 신의주지역(황금평, 위화도 등)
- 북중 산업협력 및 중국의 대북 투자 활성화
-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물류, 전력, 통신 등 산업인프라 중점 개발

<그림 1>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

중국 동북개발의 북한개발로의 연계	• 중국 동북지역의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엄청난 자원수요 창출 • 원자바오와 김정일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중국의 북한자원진출과 동북개발차원에서의 북한 진출 가속화 • 다양한 연계 인프라 개발 (철도, 도로, 항만 등)
경협거점 창설과 경협확대의 병행	• 경협거점 중심으로 확대 • 나진·선봉개발투자, 두만강지역 개발, 신의주지역의 황금평, 위화도 개발, 접경지역 철도·도로·산업개발 및 호서무역시장개설 등 • 북한의 대중국 특혜제도 및 노동력 제공
산업투자증대로 전개	• 과거 교역중심적 경험은 북한의 지속적 성장 대신 경제난 가중 • 북한의 성장 없는 경험은 향후 동북지역의 안정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 • 신 북중경협시대의 목표: 구산업의 현대화와 신산업의 창설
대북제재를 활용한 전략적 경험 추진	• 대북제재를 적극활용 한 북한시장 선점 • 중국이 강점을 보이는 교통·통신·전력·수리 등의 인프라 건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시 기 선점 가능

2) 북중무역 현황 및 평가

☐ 2000년대 중반 이후 북중무역이 급증함.

- 이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대북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이 식량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비롯한 수입 물자를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 또한 2000년대 중반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중간 경제 협력이 활성화된 것도 양국간 무역증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1990년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대에 머물렀지만, 2000년대 들어 북중무역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
 - o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5년에 50%년을 넘어, 2009년에는 78.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o 2010년의 경우는 북한 전체 대외무역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대중 무역의존도를 파악할 수 없지만 8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됨.

□ 2010년도 북중무역은 34억 7천만 달러로 전년동기(26억 8천만 달러)대비 29.3% 증가했음.

-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1억 9천만 달러로 전년동기(7억 9천만달러)대비 49.9% 증가했고, 특히 하반기에 크게 증가했음.
- 수입은 22억 8천만 달러로 전년동기(18억 9천만 달러)대비 20.7% 증가함.
- 2010년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특히 광물성 원료(대부분 무연탄), 의류, 어류 등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들 품목의 수출규모 증가율은 대체로 단가 상승폭보다 커 수출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주로 원유)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광물성연료(원유)의 수입감소는 단가 하락에 기인할 뿐 물량은 큰 변화가 없음.

□ 이러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는 일차적으로 양국 간 교역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임.

-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낮은 물류비로 들여올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정치적인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원유 등과 같은 전략물자 및 원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을 조달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에는 한반도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음.
 - o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원조는 감소하였음.
 - o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한 북일관계 악화로 북일 무역도 거의 중단되었음.
-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남북교역의 위축과 경제협력사업의 부진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표 1> 북중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대중수출		대중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0.4	-10.8	4.5	37.1	4.9	31.8	-4.1
2001	1.7	348.1	5.7	27.1	7.4	51.1	-4.0
2002	2.7	62.3	4.7	-18.1	7.4	0.1	-2.0
2003	3.9	46.1	6.3	34.3	10.2	38.6	-2.4
2004	5.9	48.2	8.0	27.4	13.9	35.4	-2.1
2005	5.0	-14.8	10.8	35.2	15.8	14.1	-5.8
2006	4.7	-6.3	12.3	13.9	17.0	7.5	-7.6
2007	5.8	24.3	13.9	13.0	19.7	16.1	-8.1
2008	7.5	29.7	20.3	46.0	27.8	41.2	-12.8
2009	7.9	5.2	18.9	-7.2	26.8	-3.8	-11.0
2010	11.9	49.9	22.8	20.7	34.7	29.3	-10.9

자료: KOTRA, KITA

3) 북중 투자협력 현황 및 평가

□ 북중 투자협력 확대 배경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시장경제의 발전
- 2000년대 중반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3성 개발전략 추진

-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련 개혁조치
- 북한의 국제적 고립상태도 중국기업의 대북진출에 유리한 환경 제공

□ 북중 투자협력의 특징

-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들어 대북투자가 급격히 활성화 되고 있음.
-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점차 성숙단계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수익에 기초한 투자 △투자영역의 집중화 △투자규모의 대형화 등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정부는 대북경협에 대해 2006년 “정부유도”에서, 2010년에는 “정부주도”로 전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북중경협은 북한의 경제활동과 시장이 날로 규범화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표 2> 중국의 대북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DI	1.12	14.23	6.50	11.06	18.40	41.23

자료: 중국 상무부, 2008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현황 및 특징

- 중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특징
 - o 대북 투자기업의 성격을 보면 대부분이 민간기업임.

- o 투자와 교역의 연관성이 아주 밀접함. 현재까지 중국기업의 대북투자는 상당부분 보상무역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o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에 집중됨.
- o 대북 투자위험의 기업 자기부담임.

□ 최근 중국 정부의 대북투자는 동북3성 개발 추진의 일환으로 대북통로 건설(인프라 구축)에 집중되고 있음.

- 중국은 동북진흥계획에 따라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와 지린성 창지투(장춘-길림-도문) 선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同개발계획에 따라 북한지역 서쪽의 신의주, 동쪽의 나진 및 청진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랴오닝성 연해경제벨트 개발의 일환으로 단둥-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착공(10.12.31)됐으며,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 건설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단둥-신의주특구의 연계개발 차원에서 황금평과 위화도의 조기 공동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참조 1> 대북투자 유망분야 및 고려사항

- 북한의 투자유치 관련 기관
 - 2009년 이후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북한은 합영투자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국가경제개발총국 등 기구를 설립
 - 합영투자위원회는 국가투자전략계획에 따라 외국정부 및 국제조직과의 경제협력을 책임지며 북한경내에 있는 외국인투자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전면적으로 관리
 - 국가경제개발총국은 북한경제개발전략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정부기관
 - 조선대풍투자그룹은 대외경제협력기구이며 경제연합체로서 투자를 유치하고 국가개발은행의 자금동원을 보장
- 대북투자 유망분야: (1)광물자원 개발, (2) 농수산물 개발, (3)도로, 항구 등의 기초시설과 도시건설 개발, (4) 과학기술 영역의 개발, (5) 제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개발.
- 대북투자시 주요 고려사항
 - (1) 북한의 실정에 대한 이해 및 충분한 기초조사에 의거한 투자프로젝트 선택
 - (2) 단기이익보다 장기적 이익에 기초한 전략적 투자
 - (3) 당국의 허가과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한 합법적인 투자
 - (4) 투자규모의 선택: 대규모 투자일수록 중앙정부의 투자안정성 강화
 - (5) 신용있는 북측 합작파트너의 선택
 - (6) 관리인원 파견을 통한 현지관리 및 북측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나. 북중 접경지역 개발 현황과 과제

1) 북중 접경지역의 경제협력의 특징 및 의미

- 최근 북중 양국은 정부 주도하에 접경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무역 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
- 북중 압록강대교 건설을 비롯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 하에 접경지역의 경제무역협력은 단순한 무역과 낮은 차원의 투자에서 점차 산업협력과 변경 지역 개발협력 방면으로 발전하고 있음.

□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 협력은 양국의 공동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임.

- 접경지역의 개발·협력 강화는 정치적으로 볼 때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경제적으로도 접경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자원의 공동 개발 및 이용을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동북경제 진흥전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단둥은 독특한 연해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연해경제개발과 대외개방의 두 가지 임무를 담당하는 한편,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과 협력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과 협력 활성화를 위해 단둥의 도시 서비스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향후 한반도에 대한 개방창구 및 협력기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북중간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자원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단둥 산업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 수 있음.

□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은 북한의 대외개방을 확대,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대외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북한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진해온 과제임.

- 그러나 정치적 우려와 열악한 인프라 상황 등으로 인해 접경지역 개발협력이 제약을 받아왔음.

-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외자도입을 통해 물류·교통, 통신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활필수품 공급부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을 개방하고 대외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자

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향후 북한 내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선도지역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은 북한이 국제협력 경험을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개방의 길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접경지역의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사회적 안정도 기여할 수 있음.

□ 북중 접경지역의 개발과 협력은 북한 및 한반도 발전의 객관적 현실을 존중해야 하고, 점진적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함.

- 특히, 접경지역 인프라건설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기초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양국간 산업구조 및 부존자원을 고려하여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경쟁력에 기초한 '신흥산업'을 함께 건설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2) 북중 접경지역의 물류인프라 개발

□ 최근 북중간에는 접경지역간의 교통, 물류시설 확충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음. 주로 철도, 도로의 건설 및 현대화, 교량 신설 및 현대화, 항만 개보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지역의 교통, 물류 인프라 투자사업은 중국 국무원 '36호 문건'에 근거한 북한과의 '도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 추진 방침이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동북 노후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36호 문건)』 제24조에서는 동북3성과 변경국가들과의 경제무역협력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 북한 도로, 항만, 구역 일체화 건설을 촉진하고, 대외협력 프로젝트를 실시. 대외원조에 있어 우선적으로 동북지역의 변경 세관과 연계되는 교통, 공항, 항만, 등 기초 인프라 건설 사업에 배정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 북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는 주로 항만과 배후 하역장, 창고 수준에 국한됨.

- 일부 기업이 항만연결 도로나 철도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수준에서의 막대한 재원 조달 및 사업의 수익성 창출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격화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북중 서부 접경지역의 주요 협력사업 추진 사례

- 신압록강대교 건설사업
 - 2010년 12월에 착공. 프로젝트 총 투자비용은 약 18억위안 인민페로 추정(중국구간 12억위안)됨.
 - 교량 길이는 약 1km이고 진입로가 5km이며, 대교는 중국단둥 신개발구 랑토(浪頭)와 조선신의주 용천을 연결함.
 - 중국의 신압록강대교 건설 추진배경으로는 '5점 1선'계획의 시발점이자 다롄항과 더불어 동북지역 주요 출해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둥의 입지강화와 함께,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차원에서 추진중임.

- 평양-신의주고속도로 건설사업
 - 평양-신의주 연결 고속도로사업도 2009년 원자바오 총리와 북한 김영일 총리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짐.
 - 평양-신의주 고속도로는 1996년 개통된 평양-향산간 고속도로의 중간지점인 평안남도 안주와 신의주를 연결하는 노선연장 약 160km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며 공사비용은 약 25억 위안으로 추정됨.

□ 북중 서부 접경지역 교통,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 물류시스템의 경쟁력 저하
 - 중국측 차량 운행은 북한 신의주 야적장까지만 운행이 한정되어 있어, 북한 차량이 화물을 받아 평양 등지로 운송하는 시스템임.
 - 이 과정에서 화물의 손·망실과 운송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물류비 상승요인이 발생함.
 - 신의주-단둥 철도의 경우에는 까다로운 세관검색과 폐쇄적인 통행절차

의 문제로 압록강 철교를 통한 운송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국경교량 및 물류하역시설, 수송장비의 노후화
 - o 중국의 대북 화물량 가운데 30% 내외가 통행하는 압록강철교의 경우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통행 중량 제한(약 12톤), 편도 운행으로 인한 통행량의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함.
 - o 화물운송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 온 물자 상당 부분이 기계가 아닌 수작업에 의해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o 신의주 지역에 화물 야적시설은 있으나 지게차, 팔레트 등의 기초적인 운반장비가 매우 부족하여 상하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역내국가와의 공동 협력방식으로의 개발 추진
 - o -국제운송망은 '가장 싸고 빠르고 안전한 수송로' 구축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 o 또한 특정국가 독점적 사용이 아닌 역내국가의 공동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통망 현대화 및 건설사업은 공동개발 형식이 바람직.
 - o 북중 서부지역의 교통망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Landbridge 기능과 동북아 역내 간선수송망으로서의 기능이 가능

3) 창지투 개발과 북중 경제협력

- 북중 접경지역의 물리적 연계성 강화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되는 것이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지린성의 창춘-옌지-투먼의 교통인프라를 축으로 개발과 대외개방 추진계획)과 라선특별시의 개발임.
- 지금까지 북중경협은 중심이 단둥-신의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린성과 두만강 연안의 경제협력은 정체되어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창지투지역은 북중경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중국은 2005년부터 '하나의 핵과 두개의 축'(하나의 핵이란 중국 길림성 훈춘시를 국제물류단지 및 선진개방형의 변경세관도시로 건설한다는 것이며, 두개의 축이란 러시아에 대한 '도로·항만·세관'과 북한에 대한

'도로·항만·구역'의 물류통로를 지칭함) 건설을 돌파구로 삼아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된 5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o 5대 프로젝트 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이 바로 훈춘-라선 '도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임.
- o 이미 중국 기업이 라진항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국 지린성의 입장에서 볼 때 라진항의 확보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차항출해(借港出海)'를 성사시킨 것임.

- 북한의 입장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라선지역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정치적 요인과 투자환경 미비 등의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라선지역의 경제개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북한도 이에 적극 호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o 김정일 위원장이 2009년 말에 라선지역을 현치지도 하고, 2010년 1월에는 이 지역을 특별시로 지정하면서 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3>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대상지역	- 장춘시의 부분적 지역(장춘시 도시지역외해시구태시와 농안현)길림시의 부분적 지역(길림시 도시구역외하시와 영길현), 연변조선족자치주 등 7만 3,000평방킬로미터가 그 대상으로 길림성면적의 39%를 차지(인구는 1,090만 명으로 40%)
발전목표	- 1단계(2012년까지): 2008년 경제총량3,640 억 위안 의 2 배 삼림피복률 60% 이상유지 - 2단계(2020년까지): 경제총량의 4배 이상, 삼림피복률 68% 이상유지
개발구도	- 훈춘을 창구로, 연길-용정-도문을 최전방으로장춘 길림을 엔진으로, 동북후배지를 버팀목으로 한다는 구상
8 대 중점공정	- 두만강지역 국제자유무역지대 건설, 장길도 국제내륙항구 건설, 과학기술 창조지역 건설, 국제협력산업지역 건설, 현대물류지역 건설, 생태여행지 건설, 최첨단 서비스업 집중지역 건설, 현대농업모범지역 건설

자료: 배종렬,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진전과 국제협력과제", 「수은 북한경제」(수출입은행, 2009년 겨울호), p.61.

- 중국 국무원의 '개발계획'에 의하면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개발 및 개방의 선도구로 삼아 노후 산업기지인 동북 3성의 '동북진흥'을 추진함과 동시에 계속 추진되어 온 두만강구역 합작개발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위해 두만강구역과 지린성의 창춘·지린·투먼을 "일체화 전략"을 통해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키로 하였음.
- '창지투' 선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역인 훈춘시를 개방창구로 하고, '연길(延吉)-용정(龍井)-투먼(圖們)' 삼각지를 개방의 전진기지로 하며, 창춘과 지린 양대 대도시를 직접적인 배후지로 하여 개발 및 개방의 파급효과가 국내외로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형성한다는 것임.

□ 창지투 개발계획은 북한 러진선봉과의 연계개발 가능성 때문에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음.

- 북한은 2010년 1월 4일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했다.
- 이는 201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대외시장의 확대와 무역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한데 대한 내각의 첫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됨.
- 라선지역 개발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라진항임.
- 항구가 부족한 중국 동북3성 입장에서는 동해로의 출구이자 물류의 중심지인 라진항 개발과 투자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인근 중국의 다롄항과 단둥항이 이미 물류가 포화상태이고,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나아가 몽골까지도 상대적으로 라진항으로의 물류이동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은 라진항 개발을 통해 동북3성의 물류효율성을 제고하고, 동해로의 해양물류망을 확보함으로써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중국의 창지투 개발에 자극받아 지난 20여년간 정체되어 있던 라선특별시가 본격 개발된다면, 북한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향후 북한의 대외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했고, 북중 양국 정상간 합의된 협력사업이라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및 개발금융에 적극 나설 경우 개발성공 가능성이 한층 높은 것으로 전망됨.

다. 북중 경제협력 전망 및 한중 협력과제

1) 북중경협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심화는 비록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현상이기는 하나 특히 최근 들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천안함 사건이후의 남북교역 중단 등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북중간 경제관계의 심화에 따른 우려의 배경에는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에의 예속가능성, 북한의 전략자원에 대한 중국의 선점, 향후 남북한 경제공동체 또는 통일경제의 형성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 등이 자리잡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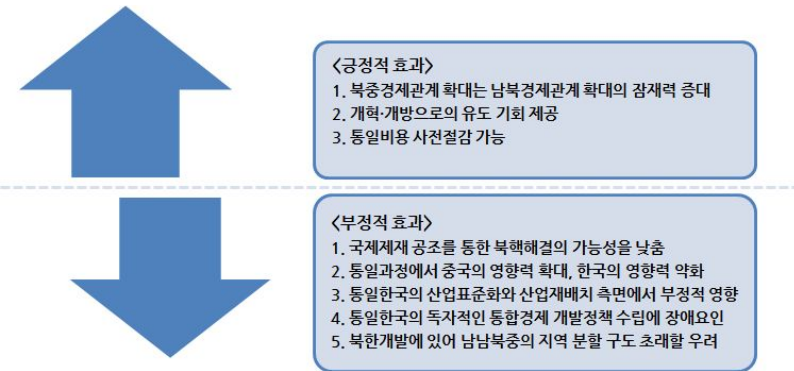
-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중간 경제관계의 심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서 북한경제의 안정 및 성장에의 기여, 개혁·개방에의 유도, 통일비용의 절감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음.

□ 남북관계에 있어 현재와 같은 단절상태에 변화가 없고 또한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라는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심화'와 더불어 '북한의 잠재적 전략자원에 대한 선점효과의 상실'에 대한 우려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음.

-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는데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북중경협이 심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장차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중국과 함께 북한 개발계획에 동반 진출하여 실리를 모색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편이 보다 나은 건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임.

<그림 2> 북중 경제관계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그림 3> 북중 경협에 따른 한국의 정책과제

1. 북한문제에 대한 안보·경제가 병행된 다차원적이고 포괄적 접근 필요
·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창출
2. 북한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위치를 고려한 통합경제의 구체적 내용 구상 필요
· 북한은 중국 동북3성·러시아극동·일본·한국 권역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요충지
3. 한국의 동북아 경제협력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 필요
· 향후 중국의 대북 물류개발에 지분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필요 (한국과 동북3성과의 교류)
4. 북중경협을 통합경제건설의 재원부담을 국제사회와 중국에 분산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
· 지속적인 북중경협 모니터링과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통해 북한개발 및 통합경제의 비용축소 기회로 활용
5. 북중경협을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경제통합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동일선 상에서 논의할 필요
· 남북경제통합에 따른 북한의 주권상실 혹은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불식시키는 효과

2) 북중경협과 한중관계

□ 중국의 대북정책은 2009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전통적인 ‘친 북노선’으로 돌아간 것으로 판단됨.

- 2010년 두차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공개적 지지가 이를 보여줌.

- 이는 2008년말 뉴욕발 금융위기로 미국의 위상이 꺾임에 따라,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가 한중관계의 악화로 나타났다는 점임.

- 북한 요인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되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길도 북한문제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대북정책이 한국의 안보전략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양국이 노력한다면 북한문제에서 ‘교집합(交集)’을 찾을 수 있음.

- 이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임.

-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이미 2010년 8월말 창춘(長春)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자력갱생에 의지해야 하겠지만, 대외협작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국가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면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촉구한 바 있음.

□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시장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지지하는 입장임.

-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이것이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교착상태가 타개되길 바라고 있음.

- 이 시점에 한국의 기업들이 북중간 경협사업에 참여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되지 않으면서 경색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이 북중 경협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에게도 유리함.
 - 한국기업이 참여를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중국의 자본-한국의 기술-북한의 원자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3국간 경협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 통일 이후 국가통합까지를 내다본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북중 경협사업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에 적극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봄.
- 또한 한중의 기업들이 경협사업이라는 '교집합'을 늘려간다면 경색된 한중 관계도 한차원 높은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임.